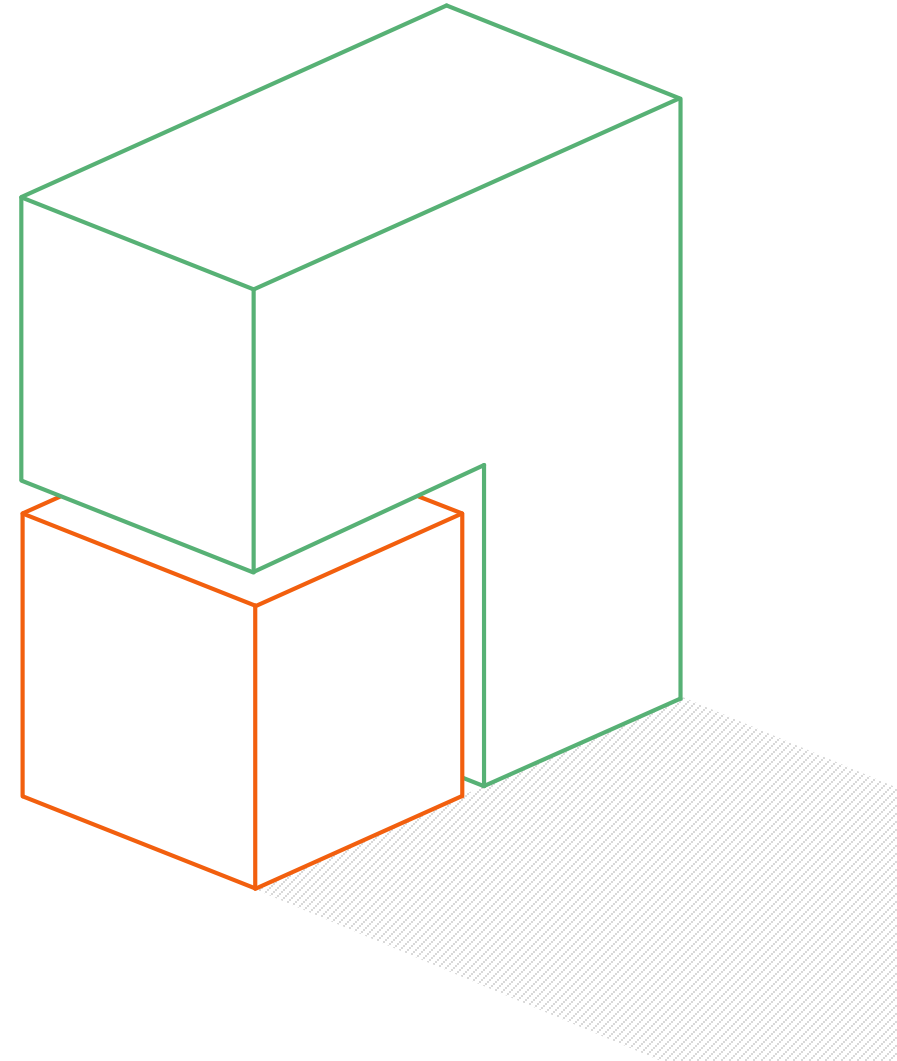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2021-KIHF-177



20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동향보고 하반기



들어가기



- 분석 개요
- 하반기 언론보도 현황

들어가기 분석 개요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자료 수집·분석 단계

구 분	자료 분석
모니터링 키워드 16개 기사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빅카인즈(BIG KINDS) 플랫폼 모니터링 키워드 16개 검색 54개 언론사 온라인 기사 수집
중복기사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중치순 상위 50개 특성추출 자료를 기준으로 여러 모니터링 키워드 간에 중복되는 기사 삭제 중앙지>경제지>방송사>지역종합지>전문지 순으로 중복되지 않는 기사 수집
유사도 기준 이슈 그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사 본문 명사상당어구를 기준으로 유사도 50% 이상인 기사들을 이슈별로 그룹화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이슈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과의 연관성, 사회환경 변화, 가족정책 서비스와 관련도가 높은 이슈 그룹 선정 그룹 외 기사 검토 및 관련 이슈 선정

수집 방법 및 기간

1 빅카인즈(BIG KINDS) 활용 언론 보도자료 수집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 54개 언론사의 온라인 보도내용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BIGKINDS, WWW.BIGKINDS.OR.KR)'에서 모니터링 키워드를 검색하여 관련된 온라인 기사 수집

2 21. 6. 25. ~ 12. 7., 5차에 걸쳐 온라인 보도자료 수집

6차	7차	8차	9차	10차
6. 25. ~ 7. 30.	8. 1. ~ 8. 31.	9. 1. ~ 9. 28.	9. 29. ~ 10. 31.	11. 1. ~ 12. 7.

모니터링 키워드 (16개)

- | | | |
|-------------|-------------|----------|
| 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7 1인가구 | 13 코로나아동 |
| 2 여성가족부 | 8 양육비 | 14 코로나돌봄 |
| 3 가족서비스 | 9 아동학대 | 15 결혼 |
| 4 한부모 | 10 아이돌봄 | 16 입양 |
| 5 다문화 | 11 건강가정지원센터 | |
| 6 가족친화 | 12 코로나가족 | |

모니터링 키워드 정리

- 효율적인 기사수집을 위해 7차 동향보고 부터
모니터링 키워드 23개를 16개로 정리
- 유사한 기사가 보도되는 검색어는 통합
 - 결혼, 입양, 방임 아동(상체 검색어) 키워드 추가

온라인 기사 수집대상 언론사 (54개)

- | | |
|--|---|
| <p>1 중앙지 (1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p> <p>2 경제지 (8)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p> <p>3 방송사 (5)
KBS, MBC, OBS, SBS, YTN</p> | <p>4 지역종합지 (28)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p> <p>5 전문지 (2)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p> |
|--|---|

들어가기 하반기 언론보도 현황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도표 1 차수별 수집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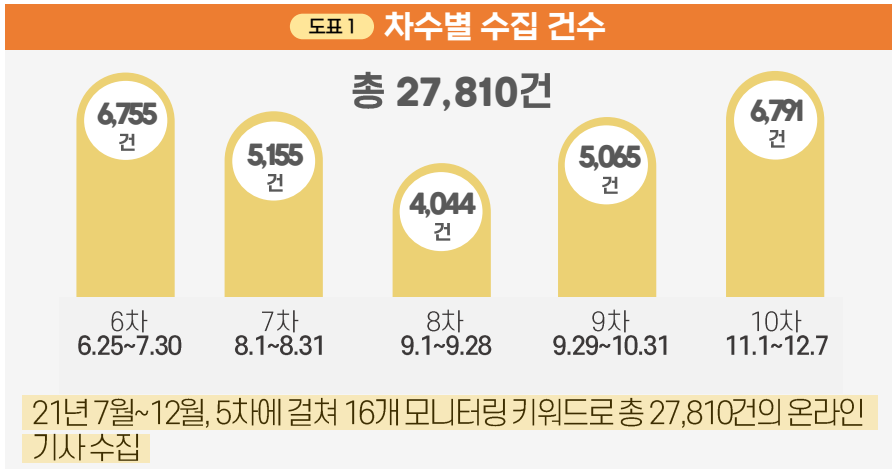


도표 2 모니터링 키워드별 보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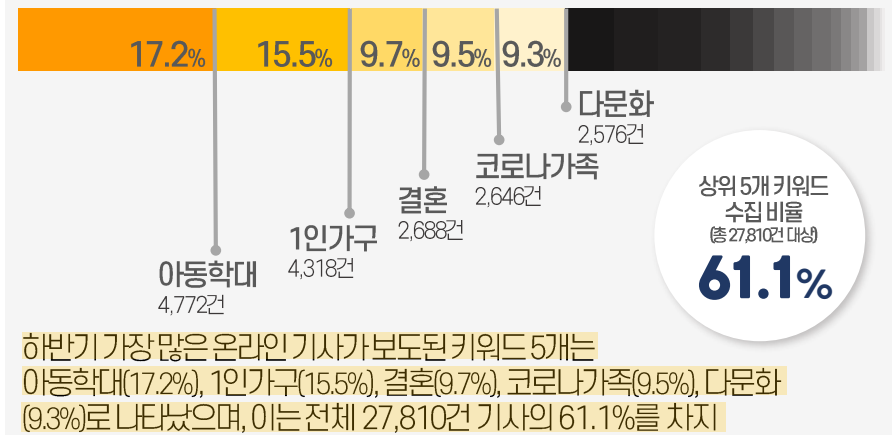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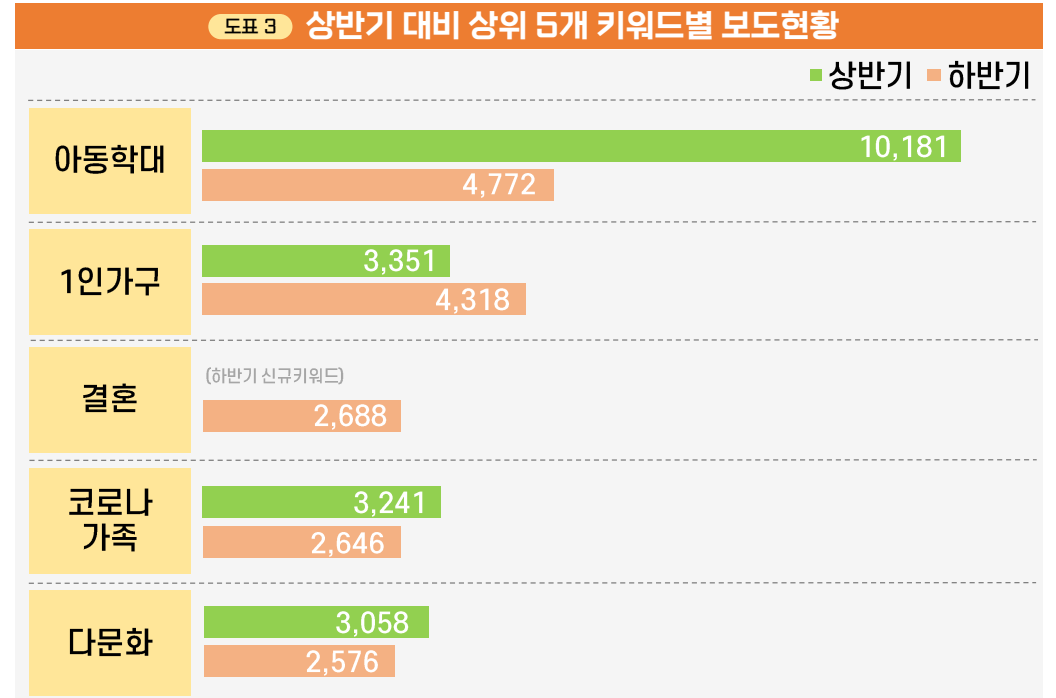


도표 3 상반기 대비 상위 5개 키워드별 보도현황



하반기 가장 많은 온라인 기사가 보도된 상위 키워드 5개는 상반기와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특히 '아동학대' 키워드는 하반기 온라인 기사 키워드 중 가장 많이 보도되었으나 상반기 대비 50% 이상 감소
'1인가구' 키워드는 상위 5개 키워드 중 유일하게 상승 수치를 기록
'결혼' 키워드는 하반기 새로 추가된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온라인 기사가 보도됨

하반기 주요 동향보고 이슈



- 한 눈에 보는 하반기 이슈
- 코로나19
- 다양한가족
- 아동학대
- 양육비
- 유관기관 연구, 사업

언론동향으로 본 가족정책서비스 이슈 한 눈에 보는 하반기 이슈

2021년 6월 25일 ~ 12월 7일 중 온라인에 보도된 기사들을 수집·분석한 결과 37개의 주제가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이슈로 선별되었다. 이들 이슈와 기사들을 종합 분석하고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고유 사업과 연관하여 총 30개 주제를 활용, 하반기 가족정책서비스 주요 이슈를 '코로나19', '다양한 가족', '아동학대', '양육비' 4개로 분류하였다.

6차 (6.25~7.30.)	7차 (8.1~8.31.)	8차 (9.1~9.28.)	9차 (9.29~10.31.)	10차 (11.1.~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혼란하고 힘들어진 아이와 부모, 취약계층 3대 인구리스크 본격화, 돌봄 정책 해소하여 경력단절여성 막는다 부모, 교사, 산후도우미, 보호주체가 가해자로... CCTV, 자치경찰 대응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대 최저 출산율... 육아휴직은 여전히 눈치, MZ세대는 '자녀' 꼭 있을 필요 없다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청소년 임신 등 사각지대 해소도 필요 연이어 발생하는 반이륜차 아동학대 사건, 가정방문 늘려 학대 징후 사전에 발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개념의 확장, 동거 관계는 만족도 높고 독신자 친양자 입양 가능성도 열린다 육아, 가사노동은 여전히 성별 불균형... 돌봄 공백 해소는 비용보다 시간·제도 중요 아동학대 가해자 실형 선고 받고 온라인 괴롭힘 위장 수사로 성범죄 막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드코로나 전환, 결혼식·등교·사회모임 등 일상회복 기대와 우려 1인 가구 40% 돌파, '조혼인율'은 역대 최저... 사각지대 없는 가족정책 필요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에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조치... 제도 시행 후 첫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로 결혼·출생아 모두 10% 감소 통계청, 2020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발표 통계청 2021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가원 김금옥 이사장 인터뷰, "가족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껍고, 임금격차는 10년 전보다 커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주는 남자만? 시대 변화에 맞춘 이례 개선 움직임, 명절도 '훈추'하거나 엄마는 외가 아빠는 친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사건 여전, 양형 기준 조정 등 대응 	<h2>코로나19</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 나가면 유료호흡, 켄거루족이 되어버린 MZ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송합니다... 49명 제한에 예비부부 트러블 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접교섭 후 자녀 안 돌려보내' '미성년자 약취' 유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복지 늘어도 워킹맘·대디 여전히 퇴사 고민 	<h2>다양한 가족</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비 이행 강화한법 개정안 7월 시행 형평성 논란 거쳐 가구별 재난지원금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쓸쓸한 죽음은 막지 못했고, 노인 1인가구도 급증 다문화 2세 대상 코로나19 혐오발언 모욕죄 인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두고 논란, 법안소위원회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부, 저소득층 한부모와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서툰다고 양육권 박탈할 수 없다 	<h2>아동학대</h2>
				<h2>양육비</h2>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언론동향으로 본 가족정책서비스 이슈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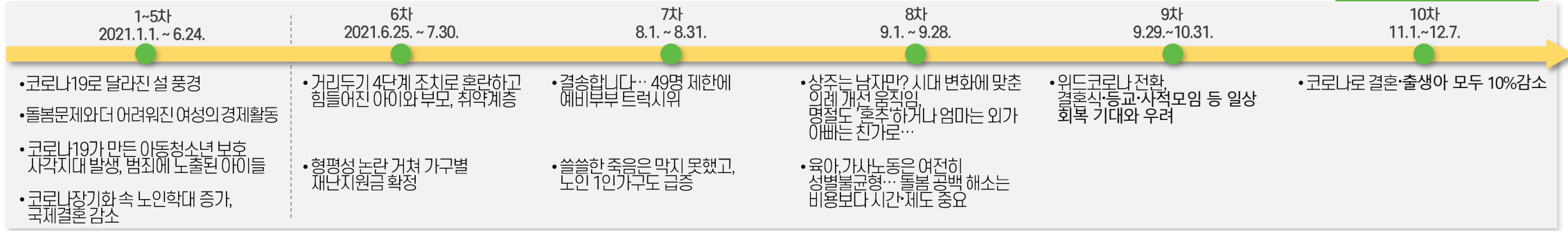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돌봄 공백 발생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 및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따라 학교들이 원격 수업에 돌입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급증하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커졌다. 학교 역시 긴급돌봄 공간과 인력 부족으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속된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습의 질이 저하되거나 학습 격차 심화가 우려 또한 나타나기도 했다. 더불어 취약계층은 원격 수업의 환경이 더욱 열악하기 때문에 유사시 꼭 필요한 수준의 교육, 돌봄이 원활하게 서비스 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 11월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인해 초중고 전면 등교가 1년 8개월 만에 재개되었다. 위드코로나 시작과 함께 부모들의 재택근무는 종료되었으나 초중고 전면 등교는 예정되어 추가적인 돌봄 공백 발생의 우려 역시 나타났다.

거리두기와 사회활동제한, 혼인을 감소에 영향 우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과 사회활동의 광범위한 제한으로 혼인을 연기 또는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21년 혼인율은 전년 동월과 대비하여 1월(-17.9%), 2월(-21.6%), 3월(-13.4%)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거리두기로 인해 결혼식 하객 수가 제한되면서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예비 부부들이 늘었다. 지난 8월, 결혼식 하객이 49명으로 제한되면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 관련 방역지침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위드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결혼식 하객 수용 제한이 크게 완화되었으나 최근 확진자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다시 증가될 수 있으며 이 현상은 출산 의향 하락으로 이어져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코로나19 사태 속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필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사회관계망 붕괴와 빈곤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독사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있다. 대면복지 서비스의 제한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1인가구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긴급 점검과 적극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1인가구도 5년 새 44만 증가했으며, 이들은 다른 연령대의 1인가구보다 거주환경 등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달라진 명절 풍경... 시대 변화에 따른 명절 관념 변화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맞는 추석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해 차례를 간소화하거나 귀성과 제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 이후로 지속적인 비대면 명절을 지내며 '명절은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혼자서 추석을 보내는 '혼추', 엄마는 외가 아빠는 친가로 가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의 이색적인 명절 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연론동향으로 본 가족정책서비스 이슈 다양한 가족

관련 온라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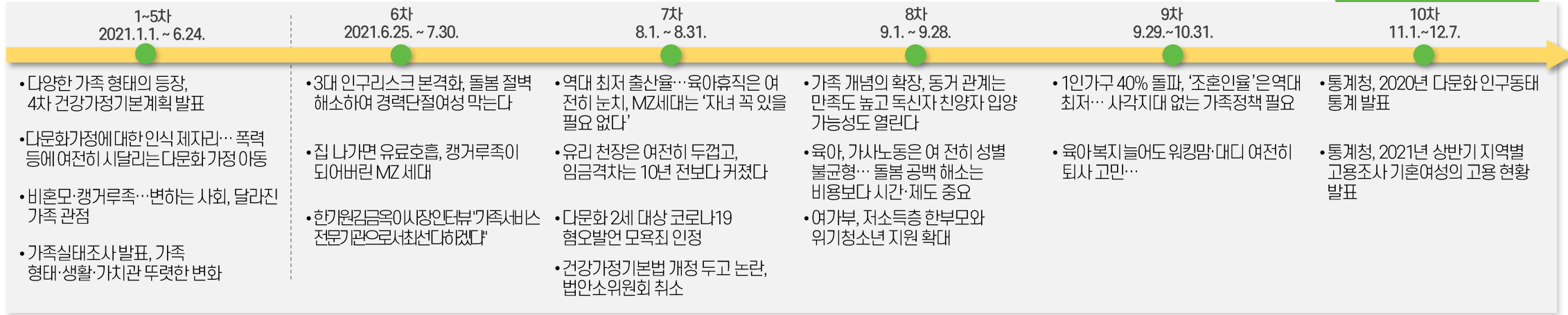
들어가기



연론동향



나가기



점차 확장되는 가족 개념, 제도의 뒷받침 필요

혼인, 혈연이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는 가치관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비혼 동거 커플 대상 관계만족도(63%)가 결혼 부부의 관계만족도(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법무부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회의에서 독신자도 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 추진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혼인제도를 거치지 않아도 의지와 능력을 가졌다면 양자를 잘 양육 할 수 있다는 인식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비혼 동거 가족은 공적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등 가족의 개념이 확장된 만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갖춰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인가구 40% 돌파...사각지대 없는 가족정책 필요

행안부 제공 2021년 3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1인 세대는 936만 7439세대(40.1%)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고령자 가구 중 35%가 1인 가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혼 및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2030 세대의 가족 가치관으로 인해 1인 가구는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1인가구 지원대상을 대학생, 기러기가족, 조손가족 등 '유사 1인가구'도 포함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으로 보편적·통합적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1년 3분기 주민등록 인구통계 발표 (행정안전부)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세대 이상
'21년 3분기	40.1%	23.8%	17.1%	19.0%
'21년 2분기	39.7%	23.7%	17.2%	19.3%

역대 최저 출산율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이 있는 가구는 4가구 중 1가구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고 최근 0세의 육아휴직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육아휴직 비율은 8.4%밖에 되지 않는다. 맞벌이 부모 10명 중 7명은 육아고충으로 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여성의 돌봄 부담을 출산 저해 및 경력단절의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도록 자녀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MZ세대는 결혼과 출산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런 가치관이 장기적으로 결혼과 출산율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연론동향으로 본 가족정책서비스 이슈 아동학대

관련 온라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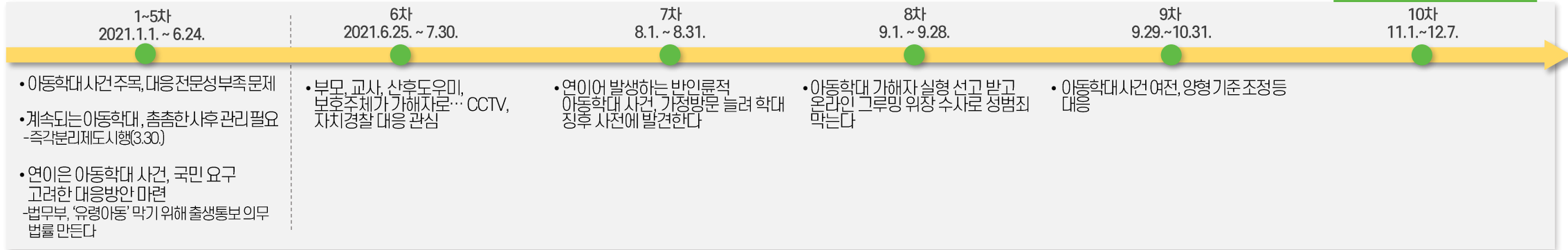
들어가기



연론동향



나가기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

상반기 16개월 입양아동의 사망 사례로 인해 전국민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모, 교사, 산후도우미 등 아동 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대상자들이 오히려 반인륜적 아동 학대의 가해자로 밝혀지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호체계 마련 등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2019년)

가정내	23,883	학교	2,277	총 30,045건
집근처 또는 길가	683	학원	220	
친척집	156	병원	63	
이웃집	36	복지시설	575	
어린이집	1,371	숙박업소	87	
유치원	139	종교시설	40	
		기타	515	

출처: 국가통계포털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방안

- 정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안방안' 발표 (8.19.)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안방안' 발표에서 학대 신고 후 초등 대응 뿐 아니라 학대 징후 조기발견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을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여 위기 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인식개선,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학대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하기로 하였다.

- 자치경찰제 시행

경찰 창사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지역별 주요시책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내세워 실질적인 치안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도 무죄를 받거나 현장에 출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어 경찰대응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아동 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 시행

9월 24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유인 권유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경찰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 수사'도 허용되어 제2의 'n번 방'이 없도록 예방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대법원, 아동학대 양형기준 세분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관련 양형 기준을 세분화하여 2차 가해나 상습범을 가중처벌 하는 기분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아동매매 성적학대 항목이 새로 추가되어 아동 인권 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론동향으로 본 가족정책서비스 이슈 양육비

관련 온라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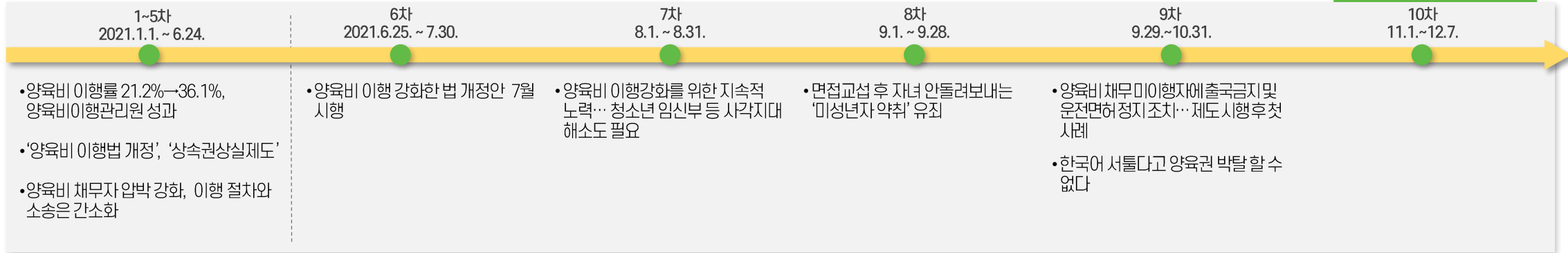
들어가기



연론동향



나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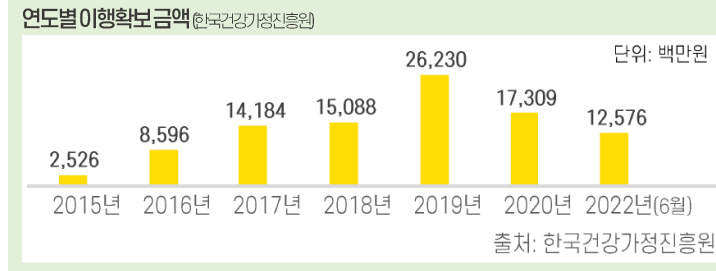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법과 제도권 내에서 양육비 이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제도 시행 후 양육비 채무 미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조치 등의 사례가 연이어 취해졌다. 채무자 중 한 명은 밀린 양육비를 일부 지불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양육비 채무 미이행 문제 해결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출국금지는 6개월,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로 제한되어 있어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얼굴없는 명단공개로 인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건이 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까지의 장벽이 높아 현실을 반영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업무협약을 맺어 양육비 이행 지원 시 각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사건 범위와 법률적 책임 등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사건처리 속도 개선이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 등 양육비 이행업무의 효과성을 높여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청소년 임신부 등 실제로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미혼부모의 양육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동향으로 본 가족정책서비스 이슈

유관기관 연구, 사업

들어가기



언론동향



나가기



<p>6차 6. 25. ~ 7. 30.</p>	<p>한국경제연구원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분석과 시사점 • 기혼 여성의 고용률 현황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개선점 제언</p>	<p>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유형이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 • 맞벌이 자녀의 방과후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료 지원 차등화 방안 제언</p>	<p>보건복지부 2021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 코로나19로 인한 심리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으로 전국민 심리지원 강화 예정</p>	<p>통계개발원 질문주도 근거 기반 정책과 통계의 연계: 고령화 정책의 사례 • 중요한 정책적 질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질문맵 등을 이용한 '질문기반 EBP 구현 방법론 틀' 제시</p>
<p>7차 8. 1. ~ 8. 31.</p>	<p>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 과제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시설 구축, 교원 확충, 학습지원 방안 논의</p>	<p>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 결혼 사회 등에 대한 Z세대 가치관 변화 조사 • Z세대 가치관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 논의</p>	<p>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인구 변화 관측 지표로서의 합계출산율의 의미 • 출산지원 정책의 결과 변수로 두루 사용되고 있는 합계출산율의 효용성을 재검토할 필요성 있음을 시사</p>	
<p>8차 9. 1. ~ 9. 28.</p>	<p>한국개발연구원 가족 유형과 아동기 인적자본 형성 • 한부모 가족 아동의 건강, 정서 등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지 않으나 학습 관련 요소에서 저하되는 모습이나 타남 • 한부모 가족 가사 부담 완화를 정책 필요</p>	<p>통계개발원 초저출산 경험 및 회복 국가의 특성 분석 과제 • 가족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 명확화 등 회복/미경험 국가 지표 참고하여 정책 개발 필요성 시사</p>	<p>육아정책연구원 빈곤 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요구 분석 및 지원 과제 • 빈곤 가정의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상황 분석 • 빈곤 가정에 대한 투자 및 지원 방안 제언</p>	
<p>9차 9. 29. ~ 10. 31.</p>	<p>서울연구원 1인가구의 다차원적 특성과 유형화: 지원 방향과 전략의 출발점 • 1인가구 정책 분야별, 생애주기별 세부 서비스 개발 방향, 제도 및 조직 등 종합적 시사점 제시</p>	<p>국회입법조사처 육아패널티의 현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 • 육아패널티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업주 입증책임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 권리 보호가 필요</p>	<p>한국여성정책연구원 물뚝은 맞지만 가짜는 처인가?: 20-30대 1인 여성들이 일에서 느끼는 중심성으로 • 2030 1인 여성 중심 일과 돌봄에 대한 인식 조사 • 일과 돌봄의 양립을 위한 실질적 사회적 대안 마련 필요성 제시</p>	
<p>10차 11. 1. ~ 12. 7.</p>	<p>국회입법조사처 아동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대상 연령 정의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생애주기 단계별 법령 및 용어, 정의 등의 이해와 일관성 필요</p>	<p>육아정책연구소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 • 아동학대 관련 정보 관리 체계 강화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해 아동 보호 안전망 개선 및 국가차원 정책적 지원 필요</p>	<p>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평가 지표 연구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전산 시스템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지표 개발 필요성 제시</p>	

유관기관 동향

- 상반기에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아동의 등교가 확대됨으로써 이에 맞는 등교 정책, 돌봄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여성의 자아실현과 자녀양육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 마련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 다양한 가족과 관련하여 점점 늘어나는 1인가구, 고령가구 사례 분석 및 지원 방향과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한부모 가정, 장애아가족, 빈곤가정 등 사회적 약자 가족 유형에 대한 상황 분석 및 정책 시사 연구도 다수 발표되었다.

나가기



- 가족정책 이슈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사업대응 현황

가족정책 이슈별 한가원 사업대응 현황

들어가기



연론동향



나가기



코로나19

‘코로나-19 심리방역서비스’ 개설

- ✓ 기관 홈페이지(www.kihf.or.kr)에 코로나19 심리방역 코너 신설
우울자카진단및해석서비스를제공,코로나19시대국민심리및정신건강상태 점검

제2차, 제3차 온라인 가족포럼 개최

- ✓ 제2차 가족포럼: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가족서비스전망과 과제
코로나19이후 가족서비스이용 현황과 수요, 가족생활변화, 가족에 대한
인식과태도 변화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서비스를 제안,토론
- ✓ 제3차 가족포럼: 코로나19이후 가족센터비대면상담운영 현황과 과제
비대면가족상담운영현황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대면가족상담환경구현방안
제안,가족센터화상상담운영사례 공유를 통한 상담서비스 운영방안을 제안,토론

아동학대

방임(보호) 아동·청소년 원가정 기능회복지원사업

- ✓ 방임 아동·청소년의 원만한 원가정 복귀를 위한 지원 서비스
부모상담·교육, 관계개선 프로그램, 면접교섭 등 개별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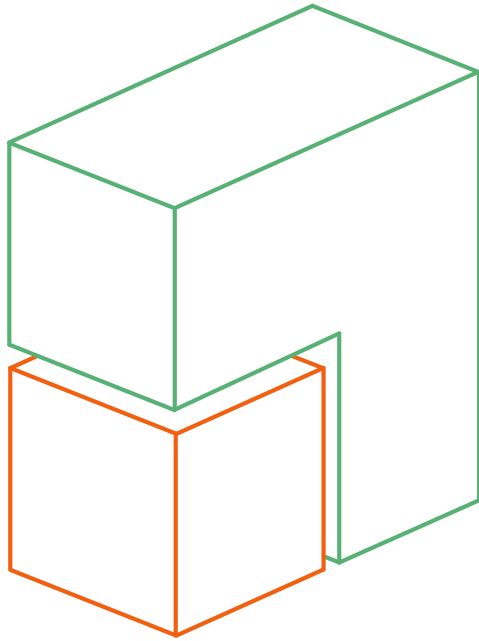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

- ✓ 다양한 가족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
향후 1인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가족센터(생활SOC복합화 사업) 건립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가족서비스 중추적 기관으로 기능 강화 예정

양육비

양육비 이행 및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3개 기관과의
“양육비 이행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건처리 속도 개선이나 예산
집행 투명성 등 양육비 이행 업무의 효과성 증진
- ✓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숙명여자대학교와의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문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의 복리 증진과 성장 지원을 강화



20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정책서비스 관련 동향보고 하반기